

# 국제 SR(Social Responsibility) 표준 태풍이 몰려온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하는 사회적 책임(SR) 표준화 태풍이 지구촌 전역을 휩쓸고 있다. 이 표준이 제정되면 어느 국제규약보다도 파괴력이 클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초순, 태풍의 진원지인 호주 시드니에 다녀왔다. 국제SR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ISO가 개최한 총회에는 지구촌 53개국 및 ILO, GRI, UN 등 26개 연관기관에서 파견한 3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SR표준화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유한대학장 등 모두 16명이 참석했는데, ISO 산하 표준화작업반이 준비한 국제 표준안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ISO가 4차 회의를 거쳐 준비한 표준안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 기업은 물론 정부, 노동계, 소비자, NGO, 기타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모든 조직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할 것이며,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말 것, 인권을 보호할 것, 노동자를 인간으로 대우할 것,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총회는 연일 표준안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ISO가 미리 제시한 수십 페이지 분량의 표준안에 대하여 이미 각국이 제시한 의견은 무려 5,176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하는 이견도 무수히 쌓여 갔다. 이견은 대체로 두 분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ISO가 제시한 표준안 자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안에 대한 기술적 문제였다. 두 번째 문제는 표준안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한 반발로 비쳐졌다. 이를테면 표준안이 왜 영어로 되어있는가, 기업 측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너무 과하게 인용하고 있지 않는가, 선진국 대비

후발국가에 대한 배려는 왜 없는가 등이 골자이다.

이는 선진국 주도의 표준이 제정될 경우 미칠 파장을 예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시스템이 발전하고 글로벌기업이 다수 포진한 선진국은 이미 SR표준에 접근해 있다. 하지만 개도국은 이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어쩌면 영원히 선진국이 제시하는 표준을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개도국은 선진국이 유발한 태풍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다.

표준안에 대하여 개도국 참가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유사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윤리위원회(EOA)는 자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윤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높은 관세를 부여한다. 따라서 윤리기준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SR표준안은 궁극적으로 어느 조직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상생방안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각국의 대표들이 표준안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적용여부를 놓고 끊임없이 이견이 표출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국 측 참가단은 일본의 움직임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은 경단련 산하 조직원 10여 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분과에 포진하여 회의를 주도할 정도로 활약했다. 더욱 이들은 이해관계가 다른 각 분과에 참여해서도 일본이 제기해야 할 의견을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공격이 곧 방어라고 했던가. 이들은 여차피 서구 선진국이 주도하는 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조직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시드니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발생한 SR태풍이 지금 목전으로 밀려들고 있다.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갈 여지는 없다.